

우악은연 사를막다

목포내항 '바다 지켜주세요' 캠페인(목포환경운동연합 청소년환경기자, 광주문정여고) (2021. 09. 18. 토)



목 차

02 성명서

04 기자회견문

06 특별기고

09 회원기고

10 활동보고

13 회계보고

14 환경영화 / 서적

15 환경상식

16 신입회원 안내 / 광고

면전에서 '시민단체와 상생' 뒷전에서 '토건세력과 한통속?'

최고 22층, 700세대 계획의 산출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서산온금지구재개발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성명

목포시민사회소통과연대(이하 소통과연대)는 지난 8월 6일, 목포시가 추진하는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획(안)에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상생안'을 함께 찾아보라며 의견을 적극 개진해달라는 목포시 요청에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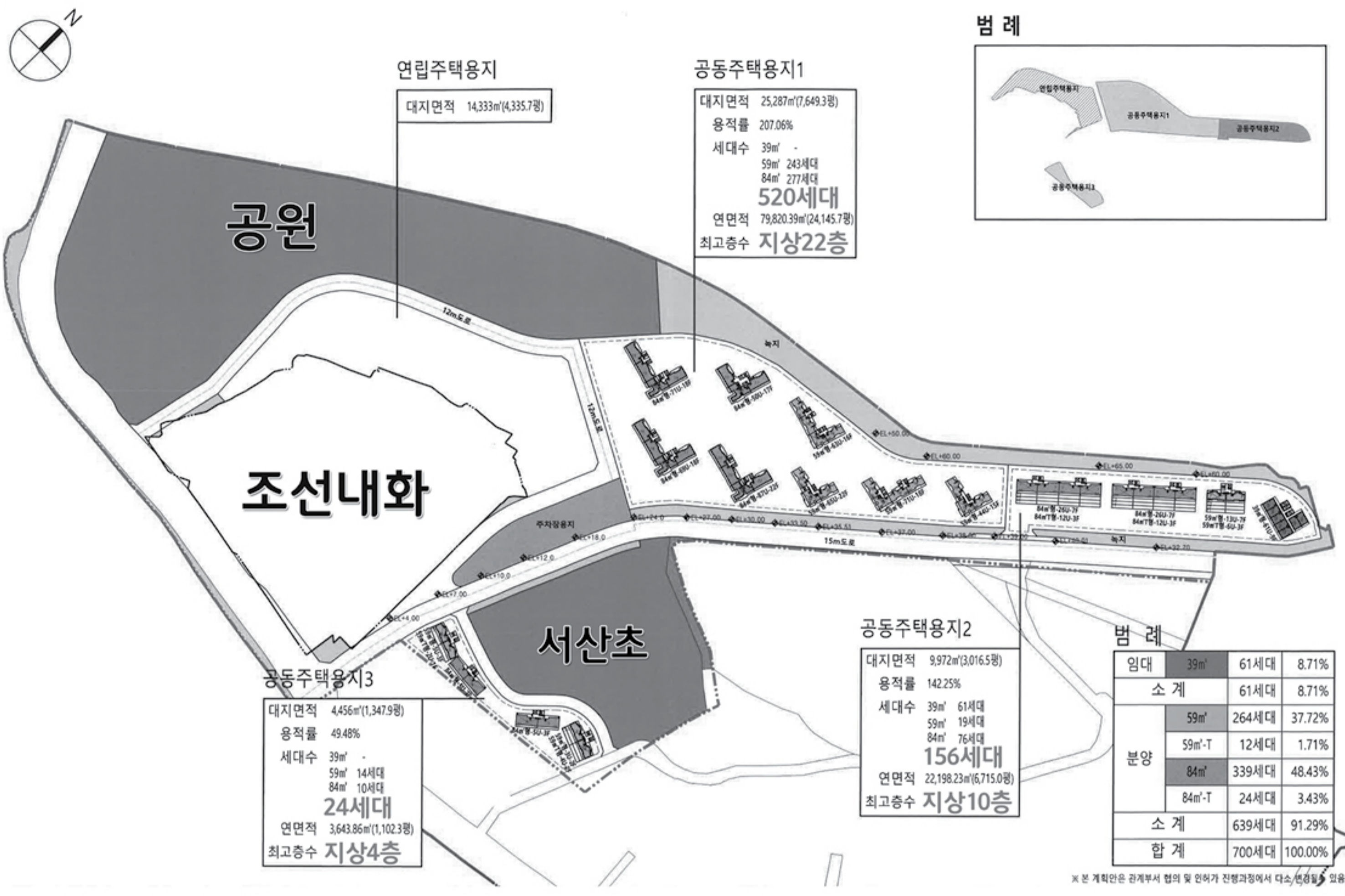
소통과연대 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아파트 건설시 세대 수에 대해서, 목포시(422세대)와 조합(689세대) 안의 절충안을 기대했었는데, 당초 안보다 한술 더 떠서 700세대를 계획한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최고 22층 높이 아파트는 유달산 경관과 조망권 훼손이 우려되므로 35m 이내 높이로 계획하라, 셋째, 오랫동안 거주해온 원주민들이 평생을 살아온 터전을 원치 않게 떠나야 하는 일이 없도록 임대아파트 비율을 10% 이상을 계획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지난 10월 8일 소통과연대의 의견에 대해 타당한 사유와 근거를 내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언제는 의견을 내달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는 타당한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라는 목포시의 주장은 애당초 시민단체 의견을 반영할 생각은 있었는지 묻고 싶다. 오히려 목포시는 무슨 타당한 사유와 근거로 22층, 700세대 안을 냈는지부터 먼저 밝혀야 한다.

2020년 10월 소통과연대는 재정비촉진지구를 해제하고 오랫동안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개발시기만을 고대하던 주민들 삶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해 목포시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해왔고, 지난해 해제 시기를 앞두고 목포시는 재정비촉진지구 연장과 함께 시민단체 의견을 꾸준히 수렴하여 상생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에 소통과연대는 목포시의 이러한 움직임에 내심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목포시의 행태를 보면서 '상생안' 운운은 한낱 사탕발림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토건세력 편에 서서 서산온금지구를 난개발 하려는 저의가 명확해지고 있다.

서산온금재정비촉진지구는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이지만 아파트 건립이 목표는 아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아파트는 기정사실이 되었고 층수를 논하고 있는 실정이다. 목포시가 정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고무줄처럼 세대수 변동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 또한 목포시는 시민단체와 조합의 중재자 역할을 맡아야 하는데도 이제는 시행사와 조합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조합과 시민단체의 갈등을 방관하고 있다.



[서산·온금 재정비촉진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건축계획(안)]

이런 식이라면 목포시에 기대할 것이라고는 전혀 없다. 한때 ‘상생안’ 마련에 기대를 걸었던 것이 부끄럽기까지 하다.

목포시는 시민단체 의견에 정확한 근거와 타당한 사유를 요구하기 전에, 자신들이 마련한 계획안에 대해 정확하고 투명한 산출근거와 타당성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조합이 제시한 세대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목포시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애초에 422세대(안)을 마련했는지, 또 어떤 조율을 거쳐 700세대라는 결과가 나왔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금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 광주 학동, 성남 대장동 등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목포시가 철저하게 ‘공익’의 입장에 서서 중심을 제대로 잡고 사업을 추진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가장 기본적인 아파트 층수마저 고무줄처럼 줄었다 늘었다하며 신뢰가 완전히 깨진 마당에 이대로는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2021. 10. 21.

목포시민사회소통과연대

“ 목포시내버스 운영 공론화위원회에 불참한다 ”



목포시내버스 공공성 강화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8차까지 진행된 목포시내버스 운영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문제점 4가지를 지적하고 하나 하나 반박한 “목포 시내 버스 공론화 위원회를 둘러싼 문제점을 시정하고 위원회를 재구성하라.”라는 요구서를 9월 17일 시와 공론화위원회에 보냈으나, 공식적인 답변은 없다. 이에 대책위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공론장 마련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본디 공론화의 구상은 지역민의 권리제한, 이해관계 충돌의 우려가 있는 현안을 두고 모두의 생각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자는 데서 출발한다. 현재, 위원회는 시장 자문기구로, 태생적, 구조적으로 독립적인 운영이 사실상 곤란하다는 한계점이 아래의 4가지 문제로 나타난 것이다.

첫째, 효율적인 시내버스 운영 및 노선체계 검증(공론화)용역사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조사연구를 신뢰하기 어려운 정황들이 드러나, 시와 공론화위원회에 용역사를 교체하여 다시 조사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목포시가 시내버스업체에 지급한 재정지원금이 적자분을 초과했는데, 이의 기초자료의 출처가 불명했다. 다음으로 시내버스 운영체계에 관한 제도를 객관적, 합리적 설명 없이 “민영제를 염두에 두고 용역을 진행한다”는 등 이미 결론 방향을 내놓고 있다. 이른바, 민영제, 준공영제, 공영제라는 운영체계 일반론에 대한 객관적 자료와 목포시의 재정지원내역 등을 분석제시하여 공론을 통해서 정해야 할 것들에 대한 결론을 이미 내놓고 있는 것이다.

둘째, 공론위원회 위원장의 중립성, 객관성 유지 의무를 지키려는 노력보다는 편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회의의 촉진자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사퇴를 요구했다.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중립적, 객관적인 태도가 전제가 되어야 하나 8차 회의에서 위원장은 민영제를 전제로 회의를 운영했음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 이는 목포시민들의 의사를 중립적으로 반영해야 할 위원장으로서 스스로 책임을 망각한 행위로 향후 공론화위원회 결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은 물론 특정 제도를 바탕

지난 10 여년에 걸쳐 시가
시내버스업체 재정 지원한
약 660억은 시민의 혈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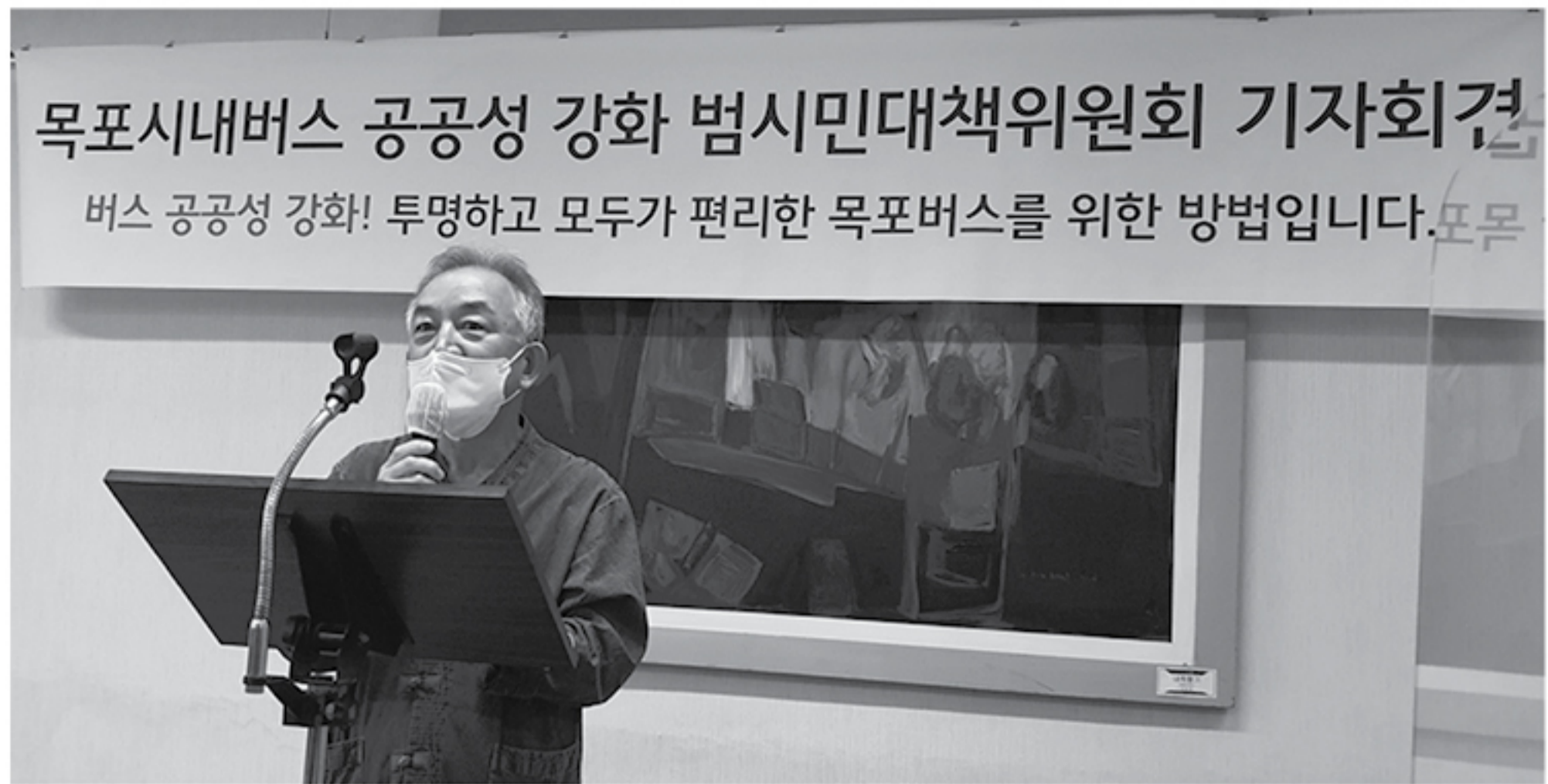
으로 회의 주제, 논의 등을 이끌 가능성이 있어, 공론화의 본래 취지에 반한다.

셋째, 공론화위원회 운영방식, 위원회는 시장의 자문기구로서 공론의 결과를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 시내버스업체의 경영개선안을 요구하거나 하는 등은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운영체계와 노선의 합리화 등에 관한 조사과정이 제대로 진행됐는지를 살펴보고, 시민참여단의 결정을 반영하여, 권고해야 하는 것이 공론화의 일이다.

넷째, 목포시는 용역업체 선정, 공론화위원 선정, 위원회의 안건 상정, 태원유진에 납작엎드린 자세 등 이미 지나치고 무분별하게 공론화위원회에 개입했다. 위원회는 목포시와 태원유진의 고충처리위원회가 아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한발 물러나라. 공론화위원회에서 목포시에 요구하는 것들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지금 목포시의 역할이다. 그리고 김종식 시장은 공영제를 위한 중단기 로드맵을 목포시민들에게 제시하라. 시장이 모든 공을 공론화위원회에 던져놓고 담당 공무원들을 통해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장을 어지럽히고 왜곡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대책위는 공론화위원회에 불참을 선언하고, 대책위에서 참여한 공론화위원은 사퇴한다. 다만, 대책위 추천 위원이 아닌 위원들의 사퇴 문제는 각자에 맡긴다.

대책위는 시내버스의 공공성의 강화는 공영제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에 걸쳐 시가 시내버스업체 재정 지원한 약 660억은 시민의 혈세다. 어떻게 쓰였는지 공익감사청구를 통해서 밝히고, 시민들에게 알리고 함께 대책을 마련해나갈 것이다.



목포시 시내버스 공론화 시민토론회 운영 개요

지난 4월 27일 시내버스업체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목포시에 버스운송사업을 7월 1일부터 1년간 휴업하겠다는 신청을 계기로 목포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논의가 시작됐으며, 목포시는 자문단 형식의 「목포 시내버스 운영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모를 통해 거주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167명 가운데 50명을 선정하여 시민참여단을 구성했다. 한 번의 사전 설명회와 두 번에 걸친 토론회를 통해 11월 17일 시민토론회 결과를 공론화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 영산강 물길 '해수유통 복원'... 생태질서 지켜야 ”

글 / 박규건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영산강은 남도문명의 발상지이자 남도민의 삶터였다. 350리 강을 타고 내륙 깊숙이 들고나는 갯물을 따라 목포에서 광주 서창 일대까지 배들이 다녔다. 200여 개가 넘는 포구가 자리 잡았다는 기록이 이를 말해준다. 그러한 영산강이 근대화가 진행된 지난 100여 년 동안 모질고 험한 수난을 당했다. 일제강점기 목포에서 영산포를 거쳐 경부선으로 이어지는 호남선 철도가 놓였다. 5·16쿠데타 이후 영산강 상류 지역에 장성·담양·나주·광주댐이 들어섰다. 1980년 5·18광주민중항쟁이 일어난 이듬해 영산강 하굿둑이 건설됐다. 영산강의 수난은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으로 극에 달했다.

영산강 생태복원 '남도의 미래' 이끌어야

4차 산업혁명에 경도된 사회적 분위기다. 생명의 땅 전남은 이제 생태문명의 전환을 통해 남도의 미래를 도모해야 한다. 남도민의 정서적 원형과 심리적 치유공간인 영산강은 생태복원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담보할 수 있다. 영산강은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항구와 수변도시, 역사문화·관광벨트 구축, 일자리 창출과 연안과 해양 기능 조성 등 '전남형 4차 산업혁명'을 가능케 하는 남도의 보고다. 시화호가 상징적 사례다. 시화호 일대는 세계적 수준의 수변정원 등 생태자원과 경기도가 추진하는 그린뉴딜정책을 연계해, 전형적인 제조업 중심 산단에서 첨단 산업 중심의 생태도시로 혁신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스웨덴 함마르비, 싱가포르 클라키, 일본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 21이 수변을 끌어들이며 도시재생과 함께 경제적 특수효과를 이끈 대표적인 경우다.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부산시는 시민사회와 적극적 거버넌스를 통해 낙동강 하굿둑 시범개방을 대선 국정과제로 채택시켰다.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환경부를 중심으로 낙동강 생태복원이 진행중이다. 낙동강 하굿둑 실증실험 과정에서 회귀성 어종들이 돌아오는 등 괄목할 만한 강의 회복력도 확인했다. 한정된 짧은 해수유통만으로도 죽어가는 강을 다시 살릴 수 있고 강물은 흘러야 한다는 간명한 생태질서에 답이 있음이 증명됐다.

수질이 4대강 중 가장 좋지 않은 영산강 복원의 핵심 수단은 부분해수유통이다. 이치수 기능을 하는 하굿둑은 해일과 홍수 예방을 위해 존치가 불가피한 일이다. 수질개선을 위해 해수유통을 하되 해수유통 구간인 기수역을 정하고 과학적 수단인 수치모델과 해수터널을 통해 그 양을 조절하면서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 사회처럼 강의 다원적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 영산강 복원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의 이견이 있다. 해수유통 시 예상되는 농업용수와 어장 피해 가능성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하굿둑 개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영산강 복원의 현실적 대안은 부분해수유통이다. 해수유통량을 조절하면서 강을 살리자는 것이다.

낙동강 사례처럼, 영산강 하구에서 15km 정도까지 해수를 유통할 경우, 수질개선과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담수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영산강 해수유통은 농업용수 문제와 어장오염 가능성에 대한 기본적인 해결을 전제로 출발한다. 연간 필요한 농업용수 총량조사와 함께 상류로부터 수질이 개선된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 영암호와 금호

호의 담수공급 방안도 하구축조 선진국인 네덜란드의 하구호에서 이미 실행하고 있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하구둑에서 15km에 이르는 넓은 기수역은 수질개선과 생태계복원 효과는 물론 홍수 시 급격한 담수공급에 의한 바다 어장오염을 방지해 주는 완충역할이 가능하다.

준설 보다 미·일 등 댐 해체 기조 반면교사 삼아야

전남도가 우려하는 수위상승과 염수침투는 12km~15km 지점의 염수압력센서에 연동돼 있는 해수터널의 전자조절갑문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 경우 하구호의 이치수기능은 물론 생태환경 및 관광기능의 복원과 장차 도래할 '5차산업' 시대를 준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영산강 복원과정에서 희생자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공론화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광주·전남지역 20여개 환경단체가 2019년 광주 남구 승촌보에서 영산강 재자연화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영산강 재자연화 시민행동 제공

MBC PD수첩 등이 지난 7월28일부터 8월20일까지 낙동강과 금강물을 채수해 녹조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 조사를 진행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청산가리의 최대 200배에 이르는 독성과 간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독성물질이다. WHO와 미국 환경청은 20ppb 이상 시 물과 접촉금지를 권고했다. 2016년 미국 플로리다주 녹조발생 당시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공병대를 녹조 제거에 투입시켰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16년 벼를 대상으로 녹조 독성실험을 통해 농작물이 안전하다고 발표했다. 녹조에 대한 사회적 불안심리를 잠재우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식물에 독소가 흡수된다고 반박했다. 올여름도 녹조가 발생했다. 녹조는 수돗물을 펌핑하는 취수장과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양수장도 비껴가지 않는다. 영산강 수질은 4등급으로, 4대강 가운데 가장 좋지 않다. 이러한 영산강물을 농업용수로 이용하고 있다. 녹조가 발생하는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객관화가 필요하다.

전남도는 애초 영산강하구관리센터 건립을 대선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하구센터를 통해 준설 등 영산강의 현안을 해소하겠다는 전남도의 오랜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영산강 하구 퇴적물은 중금속 오염이 아닌 유기오염이다. 영산강 유역엔 중금속을 배출하는 산단이 없다. 중금속 오염이 없는 영산강은 해수유통을 통해 강 복원이 용이한 특징이 있다. 이에 준설은 대안이 아니라는 게 시민사회의 중론이다. 당장의 예산확보도 어렵고, 장기적으로도 준설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지난 2006년 광주전남연구원과 광주과기원의 연구조사에서 제시된 준설비용 추산액이 당시 기준으로 1조3000억원이었다. 준설토 투기장 조성 및 처리비용 등은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준설이 대안인지 지역사회의 우려가 깊다.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 반복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업이니 더욱 그렇다. 퇴적토를 긁어내는 준설은 생태계에 2차 피해를 야기한다. 팔당댐 준설 논란이 반면교사다. 유기물은 해양생물의 먹이원이다. 네덜란드 피어스호나 하링블리에트호의 경우도, 해수유통을 통해 하구 퇴적물의 유기오염 문제를 해결한다. 해수 속 대량의 미생물들이 유기물 분해와 물질 순환에 뛰어난 역할을 한다. 댐의 나라인 미국, 일본 등이 생태계 복원을 위해 1500개 댐을 해체하는 까닭이다.

충남 역시 금강 생태복원이 주요현안이다. 금강과 영산강은 하굿둑에 가로막혀 있다. 이 두 강이 해수유통을 통해 복원된다면 호남과 충남을 비롯한 서남해안 어장생태계는 생물다양성 유지 등 새로운 성장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다. 강의 환경생태 문제는 특정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강과 바다 전체를 놓고 통합적으로 바라보아야 하

는 이유다.

금강하굿둑 축조 이전 바다와 소통을 하던 당시엔 밀물과 썰물에 의해 금강의 황톳물이 연평도와 흑산도까지 교류됐다. 하굿둑 건설 뒤 회귀성 어류가 감소해 관련 수산업이 붕괴됐다. 물의 영양염류가 바다와 섞이지 못해 강은 썩고, 수질은 악화됐다. 기수생태계 단절과 갯벌 생태계 사막화를 야기했다. 한강, 금강, 만경강, 영산강 등이 함께 살아 숨 쉴 때, 강과 바다가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증거한다.

전남도 '영산강 생태복원' 대선국정과제 추진 '환영'

통상 100대 과제라는 범주로 제한되는 것이 대선 국정과제다. 경쟁은 극심하고 치열하다. 그런 만큼 정치적 메커니즘을 잘 운용해야 한다. 영산강·금강 생태복원은 동일현안이다. 자치단체 간 경계를 뛰어넘는 탄력적 정책연대와 행정적 협력은 정치적 슬기다. 호남과 충남이 초광역 대선 국정과제로 채택시킬 수 있도록 영산강·금강 생태복원을 정책범위로 포괄하고 해수유통, 하구관리센터 건립 등 각 유역별 현안들을 주요과제로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정부가 강의 통합적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주시해야 한다.



나주시는 최근 청사대회의실에서 '4대강 국가하구 생태복원 국정과제 채택 전국토론회'를 개최했다. / 나주시 제공

전남도는 이번 대선 국정과제 수립을 행정중심으로 일관했다. 대선 국정과제 발굴의 필수적 구성요소인 공론화 과정을 배제했다. 강의 생태복원은 관 주도로 개발할 때와 달리 사회적 논의와 합의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 강의 개발로 형성된 이해관계 조정은 기본적 절차이자 행정행위다. 강 복원을 위해선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강 스스로 회복해 갈 조건을 열어놔야 한다. 영산강 생태복원 대선 국정과제와 관련해 전남도가 공론화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선 안되는 이유다.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영산강하구기수복원협의회, 빛고을하천네트워크, 금강하구생태복원위원회, 금강유역환경회의 등 150여 개 시민단체는 지난해부터 4대강 재자연화운동을 주도한 인사들과 학계, 연구기관 등 전국단위 전문가들로 거버넌스를 구성한 나주시민관공동위원회 산하 영산강위원회와 함께 초광역 대선 국정과제로 영산강·금강 생태복원을 공동으로 채택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오는 10월 그동안 공론화 과정을 총화하는 자리를 준비 중이다. 기초·광역단체·의회·시민사회가 민관공동으로 주최하는 토론회다. 강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오랜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초광역 단위 공론장이다.

대선 국정과제로 영산강하구관리센터 건립을 고수하던 전남도가 지난 16일 해수유통을 통해 영산강 생태복원을 추진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시민사회는 김영록 전남지사의 정책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동시에 전남도가 공론장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통합물관리는 국정의 핵심과제로 지역별·기관별로 대상화할 정책이 아니다. 민관공동으로 초광역 대선 국정과제 채택을 추진하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

※ 남도문명의 발상지이자 남도민의 삶터인 영산강 하굿둑을 개방해 생태복원에 나서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유달산은 ‘시민의 가치 있는 숲’입니다

글 | 최양선 회원

유달산은 1981년 12월 목포시 범시민 유달산 공원화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시민의 자발적인 헌신과 노력으로 조성된 목포를 대표하는 명산이다. 유달산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지명도가 높고, 상징성이 강하다. 역사성을 내포한 문화, 관광자원으로 항구도시 목포의 가장 건강한 숲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공원의 전면부는 시가지와 인접해 있으며 조각공원, 달성공원 등 시설 위주의 조성으로 접근성이 뛰어나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후면부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숲 환경과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숲길 걷기 마니아층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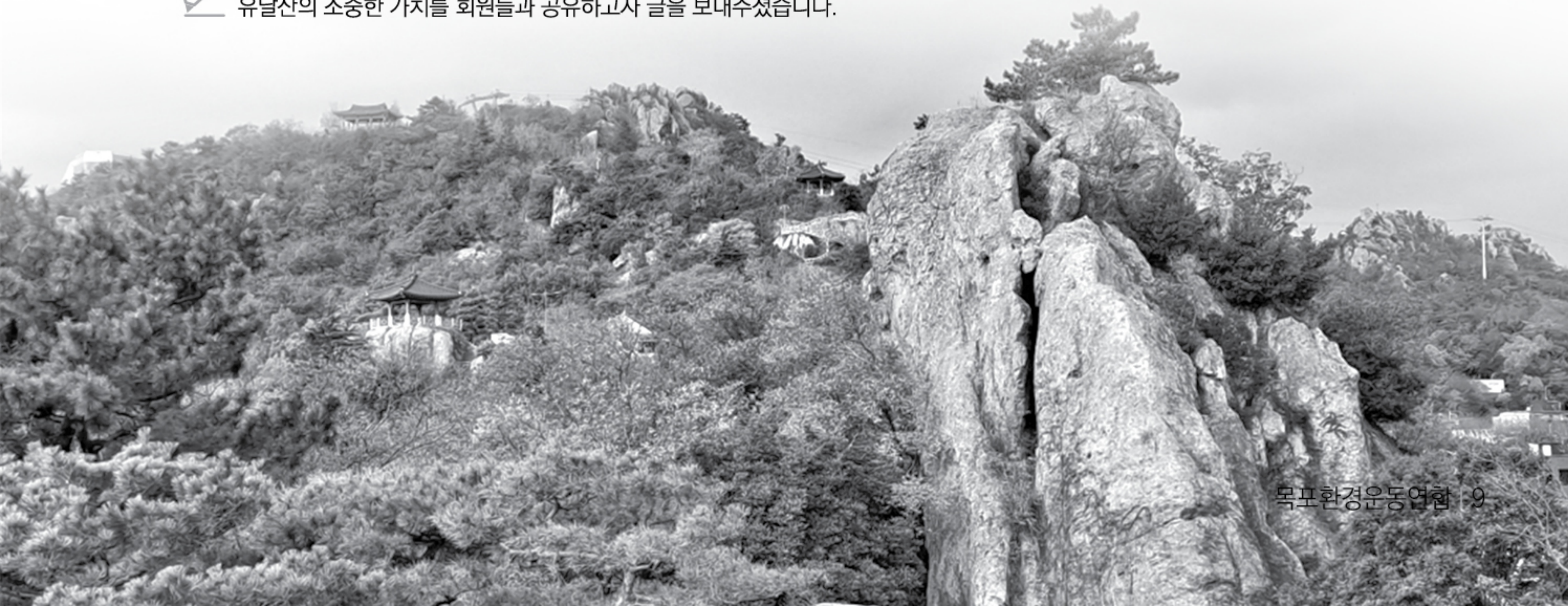
유달산 둘레길 6.3km는 밤낮을 불문하고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데무분별한 등산로의 노퍽이 확대되거나 샅길이 넓어지고 수목의 부리가 노출된 곳은 지정된 숲길 이용과 노면정비, 생태복원을 함으로써 온전하게 후손들에게 천년의 숲 문화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다. 특히 유달산의 지형이 바위층과 돌계단 구간은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곳에는 미끄럼이나 추락에 주의하면서 심표가 있는 산행을 하여야 한다.

유달산에 자생하는 지네발란, 왕자귀나무 군락지는 소중한 식물 자원으로 보존가치가 높으니 자생지 출입·채취 금지와 식물 증식을 위한 숲 가꾸기 작업으로 개체증식을 할 필요가 있다. 둘레길은 시민 참여형 모델로 숲길 정비와 꽃과 나무를 함께 심고 가꾸는 것을 제안한다. 유달산 공원에 설치된 시설물은 소중하게 아껴서 이용해야 하는 공공의 재산이므로 훼손하는 일은 안되며 소중히 다루어야 하는 시민의 재산이다. 결국에는 시설물 보수에 따른 예산이 투입되고 시민에게는 이용 불편이 가중되는 이중고를 겪는 현상이 빚어질 것이다.

앞으로 시에서는 유달산 공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낡은 시설물은 이용자 위주의 선제적이며 체계적인 관리와 다양한 공원 프로그램 개발을 병행함으로써 유달산 환경을 지키고 관광자원으로 거듭날 것이다. 또한 유달산 공원을 공원답게 만들어가고 공급 정책이 아닌 수요 위주의 적극적인 공원관리 행정이 시급하다. 종합적인 개선 방향과 차별화된 독창적인 컨셉의 발굴과 더불어 자연 자원과 인문환경의 자료를 집대성하는 정리와 장기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최양선」님은 목포시의 공원과 녹지의 보전을 위한 공원녹지과에 근무하는 신입회원으로 유달산의 소중한 가치를 회원들과 공유하고자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9월

- 01일(수) 삼학도지키키국민운동본부 출범기자회견 및 보도자료, 출범선언문 등 언론사 배포
- 02일(목) 아름다운가게 이전 오픈식 참여 / 삼학도지키키국민운동본부 해양수산청장 면담 요청 공문 발송
- 03일(금) 시내버스 공공성강화 범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 / 뜨개마루 모임
- 04일(토) 환경운동연합 전국 대표자 회의(온라인)
- 07일(화) 도시생태현황지도 착수보고 / 삼학도지키키국민운동본부 회의 / 전남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기자회견 지원
- 08일(수) 생태기행 안내 웹자보 발송 / 부귀영화 모임 / 농어촌 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농민회 기자회견 버스공영화 관련 대표자 회의
- 09일(목) 함께사는길 우편 발송(46통) / 국처장단 회의 (온라인)
- 10일(금) 삼학도지키키 카드뉴스 제작 SNS 공유 / 숙의민주주의 강연 (zoom회의 참여)
- 11일(토) 청소년기자단 모임 / 임시대의원대회(온라인) / 생태기행(남향하수종말처리장, 해변맛길 일대 17명)
- 13일(월) 삼학도지키키 카드뉴스 페이스북 유료광고 / 목포시 도시문화재과 면담(숙의민주주의 토론회 입장 전달) 목포과학대 분리배출 활성화 관련 간담회
- 14일(화) 탄소중립 온라인 교육
- 15일(수) 해안정화활동(대반동, 시네마라운지MM, 목포환경운동연합 15명) 생명의 숲 도시공원일몰제 이후 지역사회 현황 모니터링 인터뷰
- 16일(목) 소식지125호 우편발송(532통) / 삼학도 지키기 성명서 온라인 배포
- 18일(토) 목포내항 '바다 지켜주세요' 캠페인(청소년환경기자, 광주문정여고)
- 19일(일) 세월호 신항 부스 지킴이
- 20일(월) 추석맞이 세월호 합동차레 행사
- 24일(금) 신규회원 감사인사 우편 발송
- 27일(월) 도시문화재과 사무국방문 (토론회 개최 공문 전달) / 에코리딩 모임 / 전남중소사업자 연대 노동조합 기자회견
- 28일(화) 615실천회의 집행위(OZ) / 지방빼고 건강더하기 모임
- 29일(수) 해안쓰레기모니터링(진도 하조도, 해남 묵동리) / 시내버스공론화 대표자 회의
- 30일(수) 조각공원 수목생장 조사(야간 조명 관련)

· 09월 01일(수), 삼학도지키키국민운동본부 출범



· 09월 15일(화), 전라남도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기자회견



· 09월 15일(수), 시네마라운지MM과 함께하는 해안정화활동



· 09월 20일(월), 추석맞이 세월호 합동차레 행사



10월

- 01일(금) 생태기행 웹자보 발송 / 삼진산단 대기질 측정 계획 논의
- 05일(화) 삼학도지킴이국민운동본부 연석회의 / 목포과학대 자원순환교육용 이미지 제작
대불산단 민원관련 MBC보도 취재관련 방문
- 06일(수) 공문 발송(토론회 관련 국민운동본부 회의결과) / 지정기부금 단체 신청 사업계획서 작성
- 08일(금) 함께사는길 발송 / 목포제일여고 환경교육(기후위기) / 목포시장 면담관련 공문 발송
도시문화재과 서산온금 의견서 검토 답변 공문 수신
- 09일(토) 생태기행(유달산 들꽃 기행, 17명)
- 12일(화) 압해중학교 환경교육(1학년) - 기후위기
- 13일(수) 부귀영화 모임 / 홈페이지 자료 이전, 포탈사이트 검색관련 고객 의견 접수
- 15일(금) 해안쓰레기 관련 온라인 회의 / 故홍정운군 현장 실습 관련 추모 현수막 제작 (목포, 전남)
- 17일(일) 세월호 부스 지킴이
- 18일(월) 압해중학교 환경교육(2학년) - 기후위기
- 19일(화) 자원순환 관련 목포과학대총학생회 간담회
- 21일(목) 목포시장 면담(삼학도 호텔 건립 반대)
- 22일(금) 독립영화제 환경부스 운영 / 제8회 국도1호선 독립영화제 환경부스 운영
- 23일(토) 민족민주운동 역사탐방(여순항쟁 유적지, 50여명)
- 28일(목) 압해중학교 환경교육(3학년) - 기후위기

· 10월 09일(토), 생태기행-유달산 들꽃 기행



· 10월 12일(화), 압해중학교 환경교육



· 10월 23일(토), 민족민주운동 역사탐방(여순항쟁 유적지)



· 10월 30일(토), 목포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

회비 납부

9~10월

2021년

(주)보해양조/(주)수다방게스트하우스/(주)현성건설/게스트하우스달꾸메/대신아이시티(주)/
 더오래뜰/만인계마을기업/ 목포대성신탁/영암일보(주)/우진건설/코롬방제과점/특허사무
 소다임/해바라기치과의원/감의갑(장미선)/강덕수/강동호/강명곤/강석원/강선애/강성휘/
 강영규/강제석/강종량/강창원/강철수/강혜정/고경석/고광업/고광진1/고광진2/고광현/
 고성철/고윤희/고정화/공남은/곽신영/곽용열/곽재구/곽진용/구봉선/국순천/권가별/권수한/

기재명/김가영/김경미/김경민/김경숙/김경완/김경태/김공경/김관오/김광미/김광수/김광호/김귀영/김근대/김근순/
 김기범/김기봉/김기철/김나영/김대중/김대현/김도관/김도형/김동욱/김동호/김명숙/김명종/김명화/김명희/김무영/
 김미영/김미정/김미화/김민국/김민규/김민지/김병옥/김보현/김봉환/김상순/김상훈/김선남/김성길/김성륜/김성진1/
 김성진2/김성희/김세나/김수린/김숙자/김순미/김순영/김승현/김시연/김애숙/김애자/김양준/김영/김영남/김영민/
 김영범/김영식1/김영식2/김영운/김영제/김영준/김영현/김영호/김옥/김옥미/김완석/김용구/김용민/김용진/김웅기/
 김원이/김유경/김윤임/김은미/김인순/김일용/김장원/김재민/김재영/김재혁/김정민/김정훈/김정희/김종국/김종수/
 김주재/김지수/김지숙/김진형/김진희/김창식/김창훈/김철주/김탁/김태근/김태수/김태웅/김판삼/김학주/김행연/
 김현곤/김현숙1/김현숙2/김현우/김현정/김형기/김형애/김형용/김혜정/김홍안/김화영/김환석/나광봉/나양명/
 나연운/나천귀/남명숙/남주연/노애란/노천우/류금순/류미현/류수영/류재청/마흥식/모원종/무관/문보현/문성중/
 문승현/문원규/문정임/문지영/문호/문효산/민경관/박갑수/박경봉/박경서/박경양/박경재/박권철/박금단/박기남/
 박기성/박기철/박기훈/박대성/박동구/박동환/박문옥/박미덕/박미정/박민규/박배선/박병구/박상현/박성수/박성영/
 박성욱/박성원/박성준/박성현/박세륜/박순미/박안섭/박영운/박영철/박용/박용일/박용호/박원배/박유정/박유진/
 박윤길/박은숙/박은정/박은화/박은희/박재신/박재홍/박정록/박종선/박종수/박종위/박지현/박진/박창수/박창우/
 박창현/박천웅/박최균/박필수/박헌/박현/박현경/박현숙/박현철/박혜숙/박화진/박희성/방창식/배동희/배영식/
 백동진/백성숙/백영규/백재봉/변옥숙/변재영/서경수/서병권/서연순/서영선/서영옥/서정/서정만/서한배/설단숙/
 설지연/성보석/성상훈/소혜인/손문선/손민원/손봉현/손철주/손현/송광훈/송두호/송영미/송영준/송정미/신경우/
 신경희/신동영/신용주/신원/신원호/신현령/안명희/안수경/안정배/양덕수/양수민/양승희/양정호/양주동/양진국/
 양창숙/양현주/양환/양효식/염미순/염송주/오경섭/오미선/오민임/오수진/오숙향/오승원/오영출/오왕근/오재록/
 오하늘/오현주/우성주/위준철/유경호/유기성/유영근/유영순/유영업/유영창/유원석/유은경/유은숙/유주훈/유지원/
 유혜정/유효진/윤기현/윤남/윤동준/윤선미/윤선영/윤성광/윤성수/윤승희/윤원희/윤인수/윤종인/윤종일/이경매/
 이경석/이경숙/이경아/이경택/이광봉/이기식/이동훈/이명숙/이명희/이미순/이방수/이봉섭/이상엽/이성호/이성환/
 이송환/이수/이순용/이승용/이승우/이승익/이승한/이승환/이승희/이영주/이용기/이용자/이용철/이우주/이원기/
 이일호/이재경/이재우/이재이/이재현/이정식/이종환/이주연/이준화/이지우/이지현/이진아/이진형/이창일/이창현/
 이충완/이학승/이혁제/이현숙/이현승/이현정/이현진/이형광/이형완/이형주/이혜령/이혜용/임경숙/임성기/임성진/
 임세량/임은아/임은희/임재형/임정원/임지현/임진욱/임창옥/임태삼/임혁/장관호/장근천/장근현/장동춘(박민아)/
 장복천/장영미/장유선/장이주/장이진/장재구/장진실/장향금/장희웅/전경남/전경란/전남실/전대열/전상보/전성철/
 전양수/전용원/전준수/전한솔/전형숙/정고운/정동욱/정병이/정성배/정성우/정수민/정순용/정연수/정연우/정연희/
 정영주/정영호/정옥례/정우영/정유나/정유미/정유나/정윤안/정윤정/정인성/정인숙/정일/정재근/정종하/정중삼/
 정지범/정창권/정철희/정현찬/정형석/정효준/조광운/조미정/조상현/조애련/조애순/조영규/조영인/조옥현/조완오/
 조용만/조원기/조이환/조재문/조철제/조혜향/조호빈/주성은/주인철/지이화/진선화/진성필/진지연/진택근/차선미/
 차용만/차용훈/채희준/최경만/최경수/최국진/최규광/최근욱/최명숙/최명희/최비호/최석원/최선국/최성국/최송주/
 최순재/최승운/최승희/최영란/최영숙/최영식/최영철/최예화/최완수/최용선/은규/최은기/최은녕/최은주/최이문/
 최정관/최정삼/최정훈/최진상/최진철/최철수/최태욱/최현영/최호봉/최화녕/최환석/추연성/하영성/한양규/한은섭/
 허상진/허진홍/현인숙/홍갑석/홍선기/홍성혁/홍세영/홍정우/홍택용/황민수/황선주/황순진/황형수/황혜미

수 입		
항 목	금 액	
회 비	개인회비	7,801,000
	단체회비	395,000
소 계		8,196,000
사업수입		0
후 원 금		410,000
기타수익		740,000
이자수익		0
예 비 비		7,008,943

9월

- [후 원 금] • 후원회원 15만원
 • 전용원(디자인그리다) 소식지 후원금 25만원
 • 뜨개마루 1만원
- [기타수익] • 워라벨근로시간단축 지원금 60만원
 • 일자리안정자금 14만원
- [예 비 비] • 사무국 이전기금(전용) 7,008,943원

당월수입금	16,354,943
전월이월금	2,684,449
합 계	19,039,392

지 출		
항 목	금 액	
사 업 비	교육사업	408,000
	조사연구	0
	홍 보 비	0
	행 사 비	0
	연대사업	531,140
	역량강화	2,153,480
소 계		3,092,620
회 의 비	총 회 비	0
	위원회비	0
소 계		0
인 건 비	급 여	5,752,350
	복리후생비	1,296,400
	퇴직적립금	511,066
소 계		7,559,816
업무추진비	출 장 비	0
	활 동 비	80,000
소 계		80,000
사 무 관 리 비	비품구입비	0
	수 선 비	20,000
	도서인쇄비	518,000
	통신광열비	506,700
	소모품비	46,000
소 계		1,090,700
기 타	환경기금	100,000
	제세공과금	10,890
	보 험 료	100,000
	사무국 이전기금	0
	사단법인운영비	680,000
	사단법인준비기금	0
	지급 수수료	394,760
소 계		1,285,650
당월지출금		13,108,786
통장 잔액		5,930,606
합 계		19,039,3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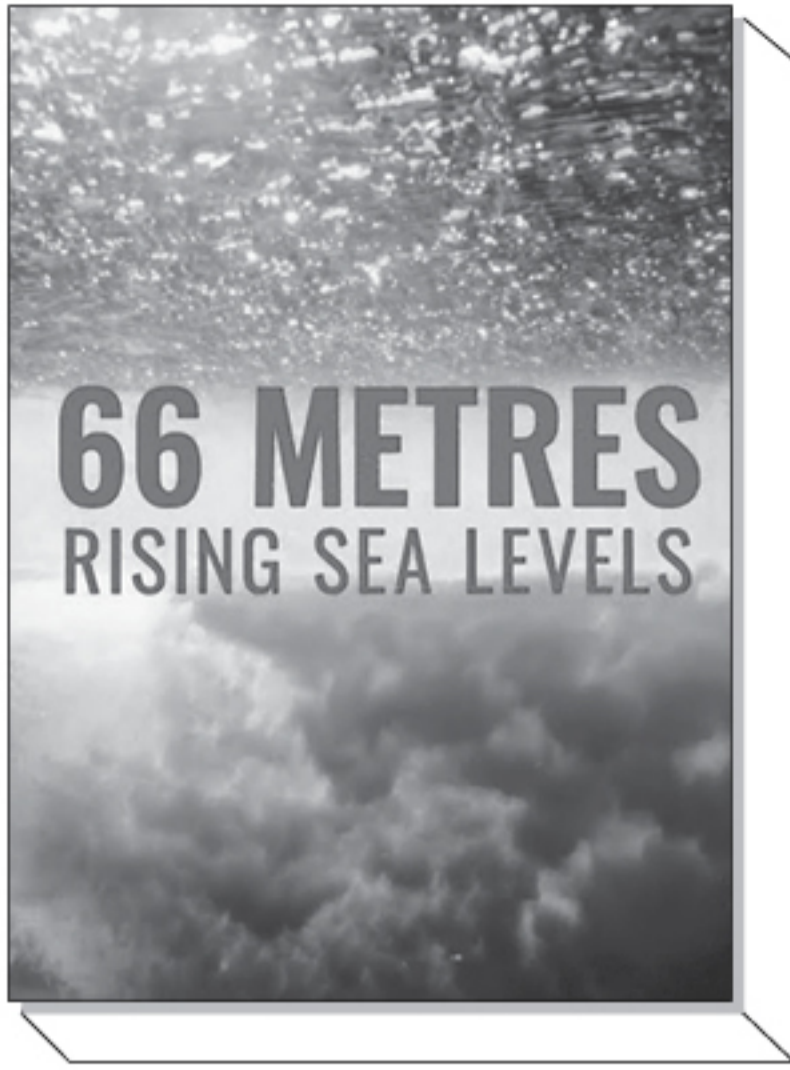
수 입		
항 목	금 액	
회 비	개인회비	8,251,000
	단체회비	365,000
소 계		8,616,000
사업수입		350,000
후 원 금		170,000
기타수익		705,000
이자수익		0
예 비 비		0

10월

- [후 원 금] • 후원회원 15만원
 • 뜨개마루 2만원
- [기타수익] • 워라벨근로시간단축 지원금 60만원
 • 일자리안정자금 7만원
 • 전남환경운동연합 3만5천원
- [사업수익] • 손수건 후원금 35만원

당월수입금	9,841,000
전월이월금	5,930,606
합 계	15,771,606

지 출		
항 목	금 액	
사 업 비	교육사업	108,000
	조사연구	0
	홍 보 비	264,000
	행 사 비	0
	연대사업	498,596
	역량강화	0
소 계		870,596
회 의 비	총 회 비	0
	위원회비	41,000
소 계		41,000
인 건 비	급 여	5,752,350
	복리후생비	1,296,400
	퇴직적립금	511,066
소 계		7,559,816
업무추진비	출 장 비	0
	활 동 비	80,000
소 계		80,000
사 무 관 리 비	비품구입비	0
	수 선 비	0
	도서인쇄비	0
	통신광열비	227,000
	소모품비	15,000
소 계		242,000
기 타	환경기금	100,000
	제세공과금	0
	보 험 료	100,000
	사무국 이전기금	0
	사단법인운영비	325,000
	사단법인준비기금	0
	지급 수수료	248,280
소 계		773,280
당월지출금		9,566,692
통장 잔액		6,204,914
합 계		15,771,606



66미터 : 66 Metres

다큐멘터리 | 독일 | 53분 | 2020년 | 감독 : 막스 뮌치, 알렉산더 랄

해수면 상승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포괄적인 다큐멘터리. 해수면은 어디까지 상승할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예상 증가 수치는 그저 공포를 조장할 뿐이었지만, 이제 이는 현실성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2100년에 이르면 해안의 모습은 지금과는 다를 것이다. 그린란드와 남극대륙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과학자들은 해수면 상승 예측값을 구하는 데 복잡한 역학관계를 반영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 닥칠 위험에 대응할 방식을 결정해야만 한다.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대응하고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

REVIEW

| 이소연 (제18회 서울환경영화제 관객심사단) 리뷰글 中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100년간 해수면이 60cm 오른다는 전망에 따라 8조 원짜리 바닷물 차단벽을 설치했지만, 2020년 침수됐다. 바닷물이 사람의 예상과 달리 빠르게 차올라 침수벽마저 삼킨 것이다. 바다는 인내심 있게 천천히 반응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지구 곳곳의 삶은 이미 턱 끝까지 물이 차올랐다. 우리는 숨을 오래 참을 수 없고, 보글보글 거리며 숨이 끊기기까지 1mm면 충분하다



기후정의 : 희망과 절망의 갈림길에서

한재각 지음 | 한티재 | 2021년 12월 27일 출간

“국제적·사회적 불평등이 기후위기를 야기하였다.”
“기후정의가 위기 해결을 위한 가장 빠른 길 여는 열쇠”
“기후변화가 아니라 체제변화!”

“인류가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을까? 애를 써야겠지만, 솔직히 자신할 수 없다. 아니 다 망할 것 같다. 미래가 없어 보인다.” 저자는 어느 강연에서 기후위기의 절박함을 이야기하다 이렇게 말했다. 말을 뱉고 난 후에야 청중들이 다시 저자의 눈에 들어왔다. 그러다 한 청소년과 눈이 마주쳤다. “혼자 절망감에 빠져 그를, 그리고

청중들을 잊고 있었다. 당황스러웠고, 부끄러웠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겁을 줘서 사람들을 일깨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아니면 공공대던 ‘기후 우울증’을 배설하고 있었던 것인지. 무슨 권리로 그들 앞에서 그런 말을 했던 것일까. 정신이 번쩍 들었다.”

연구자이자 활동가인 저자가 기후위기의 절박함 앞에서 느낀 절망감, 강연장에서 느낀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을 고백한다.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들 정도의 반성은 그를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조직하는 현장으로 이끈다. 이 책은 그러한 과정, 즉 연구와 실천의 장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토론하고 논쟁하며 씌어진 것이다. “우리 앞의 가장 강력한 적은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는 현실을 바꾸지 못하리라는 비관과 무기력”이라고 저자는 진단한다. 이 책은 저자 스스로 그런 비관과 무기력과 싸우면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이 절망감을 딛고 희망을 만들 수 있을지를 치열한 언어로 제시하고 있다.



항생제 내성은 NO!

올바른 항생제 복용 및 폐기 방법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감기나 기관지염, 대상포진 등 대표적인 환절기 질환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치료를 위해 병원에 방문했을 때,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질환일 경우 항생제를 처방받게 되는데요! 처방받은 항생제로 빠르게 회복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내성이 생겨 치료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은 항생제 내성의 정의와 예방법, 그리고 올바른 약물 폐기 방법까지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항생제 내성이란? 항생제 오남용이 위험한 이유

항생제는 다른 미생물 혹은 세균의 증식과 성장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 세균 감염 시 두루 처방되고 있는 약물이예요. 여느 약물처럼 항생제 또한 복용 시 주의가 필요한데요! 바로 '항생제 내성' 때문입니다.

'항생제 내성'이란 세균이 특정 항생제에 저항력을 만들어 지속 생존하는 능력으로, 내성이 생기게 되면 기존 복용하던 항생제로는 내성 세균의 감염 질환 치료가 어려워져요. 쉽게 말해, 같은 감염성 질환이라도 같은 약으로는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것이죠.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매년 항생제 내성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약 7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항생제 내성이 생긴 슈퍼 박테리아로 인해 전 세계에서 1년 기준 1,000만 명 이상이 사망할 수 있다고 해요. 생각보다 위험하고 무서운 항생제 내성,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생제 내성은 NO! 올바른 항생제 복용 방법과 폐의약품 처리 방법

의약품 관련 **첫 번째** 꿀팁은 항생제 내성 예방법이에요. 먼저, 질병에 걸려 병원에 방문했을 경우 항생제 처방을 먼저 요구하기보다는 의사의 판단에 따른 약물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만약 의사가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았다면 받은 약물로만 치료를 진행하고, 항생제를 처방받은 경우 증상이 좋아졌더라도 꼭 복용 방법 및 기간을 지켜 끝까지 복용해야 합니다. 또, 같은 질병에 걸렸더라도 개인 처방 약물을 타인과 나눠 먹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세균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평소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특정 질병이 유행할 경우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의약품 관련 꿀팁! 바로 폐의약품 처리 방법입니다. 집 안에 있는 폐의약품,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소각을 통해 폐기되는데요! 폐의약품을 무심코 싱크대에 버리게 되면 약물의 성분이 하천과 토양으로 유입돼 생태계 교란 및 토양, 수질 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요. 때문에 폐의약품을 버릴 때는 꼭 근처 약국이나 보건소, 동사무소에 비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반납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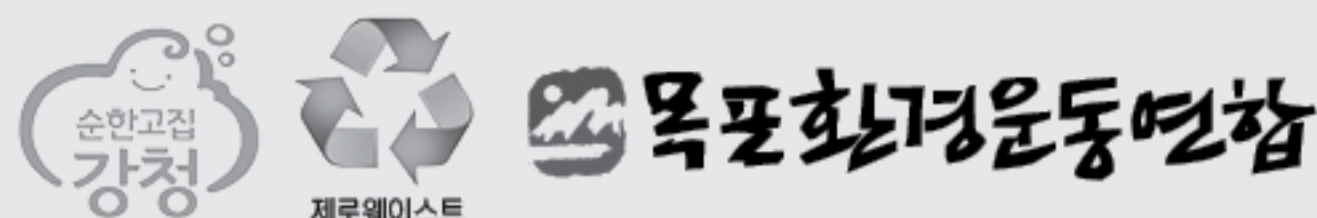
우리 몸을 치료해주는 고마운 약물! 몸과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올바르게 복용하고, 폐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인위생을 철저히 함으로써 감염 예방은 줄이고, 항생제 복용 시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꼭 복용 방법을 준수해주세요! 폐의약품은 올바르게 폐기해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 함께해요~ 환경사랑!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참조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kecoprummy&logNo=222544679747&categoryNo=6&parentCategoryNo=6&from=thumbnailList>

❖ 새롭게 목포환경운동연합의 벗이 되어 주신 분들입니다.
환영합니다. (2021.9. 8. ~ 2021. 11. 10.)

김도형(이현승) | 서영숙(최송춘) | 강영두(최송춘) | 박세륜(박현숙) | 정형권(임경숙) | 최양선(장복천)



❖ 목포환경운동연합과 강청은
포장재 간소화로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을 지키고자 합니다

물비누 | 세탁용 (1g당) : 8원 고행비누 | 세탁용 (250g) : 1,500원
 | 주방용 (1g당) : 9원 | 주방용 (250g) : 2,500원

집에서 사용하던 용기를 가져 오시면 필요한 만큼 구매가 가능합니다

▶ 판매시간 : 평일 (국경일 제외) 9:00 ~ 18:00 ▶ 문의 : (사무국) 010-8243-3169



장바구니를 사용해
지구의 짐을 덜어주세요



김종국 회원



포 마 린

혼다V6 / 야마하 V6·V8 커맨드 링크 전문점



대표 최은기

T. 061-272-0118 / 010-9492-4707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220번길 21-11

해바라기치과

원장 이 해 송



T. 010-2654-2875, 061-279-2886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172
3층 해바라기치과(산정동)

편집디자인 및 인쇄 : 디자인그리다 (061) 287-0146, 010-3888-0145

일회용품 사용으로
자연은 허리가 휩니다.

손현 회원

※ 이미지 참고(환경부)

제27회 녹색환경대상



공모부분

생활속 환경실천	일선 생활현장에서 환경보전 및 개선에 노력한 개인·단체
자연환경보전	바다 및 강(도랑 포함), 먹는 물, 미세먼지, 대기, 폐기물 등 관련 분야에서 환경보전에 성과를 거둔 단체
환경교육	환경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실천하도록 의식 제고에 기여한 개인·단체
서한태박사상 (2021년 신설)	지역환경운동의 선구적인 역할과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기여한 개인·단체

시상

종합대상(환경부장관상)	상장 및 상금 500만원
부문별 대상	상패 및 상금 300만원(개인은 200만원)
서한태박사상	상패 및 상금 100만원

※ 자세한 내용은 www.jnilbo.com 참조

全南日報

[광고문의] 목포환경운동연합 사무국(061-243-3169) : 위 광고는 소정의 광고비로 제작되었고 광고비는 연말정산 기부금 처리됩니다.